



발표자료집

새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 통일 비전

2017. 6. 29 목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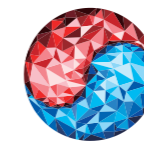
T 02-398-3595 E onekorea@yna.co.kr W <http://www.onekorea2017.co.kr>

주 최



후 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가안전전략연구원,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2017 연방뉴스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목 차

개요 및 프로그램	03
연사소개	04

기조연설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실천..... 05

천해성 통일부 차관

Session 01 새 정부 외교·안보·대북정책 추진 방향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과 당당한 협력외교	09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	17
한용섭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대북정책 추진 방향	27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Session 02 한반도 평화와 북한 변화 유도전략

북한 핵 문제 실태 및 해결방향	37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동북아 신평화지도 구상	47
신봉길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초대사무총장, 前 요르단 대사	

최근 북한 정세 진단 및 변화전망	55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Session 03 패널토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63 대한민국의 선택

좌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패널: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소장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행사 개요

주 제 : 새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 통일 비전

일 시 : 2017. 6. 29 목 13:00~17:00

장 소 :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

주 최 : 연합뉴스, 통일부

후 원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가안전전략연구원,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심포지엄 세부 구성

시 간	프로그램	
13:00~14:00	기조연설	개회식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실천 천해성 통일부 차관
14:00~14:50	Session 1 새 정부 외교·안보· 대북정책 추진 방향	발표1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과 당당한 협력외교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2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 한용섭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발표3 대북정책 추진 방향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14:50~15:00	Break Time	
15:00~15:50	Session 2 한반도 평화와 북한 변화 유도전략	발표1 북한 핵 문제 실태 및 해결방향 이수형 국가안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표2 동북아 신평화지도 구상 신봉길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초대사무총장 前 요르단 대사
		발표3 최근 북한 정세 진단 및 변화전망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15:50~16:00	Break Time	
16:00~17:00	Session 3 패널토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좌 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패 널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소장

*상기 프로그램은 행사 사정에 따라 추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연사소개


기조연설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실천

연사
천해성
통일부 차관




Session 01 새 정부 외교 · 안보 · 대북정책 추진 방향

발표 1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과 당당한 협력외교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2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
한용섭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발표 3
대북정책 추진 방향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Session 02 한반도 평화와 북한 변화 유도전략


발표 1
북한 핵 문제 실태 및 해결방향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표 2
동북아 신평화지도 구상
신봉길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TCS) 초대사무총장, 前 오르단 대사



발표 3
최근 북한 정세 진단 및 변화전망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Session 03 패널토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좌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패널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패널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



패널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소장




기조연설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실천
천해성 통일부 차관



2017 국가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세션 1 새 정부 외교 · 안보 · 대북정책 추진 방향

01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과 당당한 협력외교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02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
한용섭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03
대북정책 추진 방향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2017  국가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세션 1 새 정부 외교 · 안보 · 대북정책 추진 방향

01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과 당당한 협력외교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과 당당한 협력 외교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촛불혁명, 민주주의, 외교안보

◆ 주요인식

-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민주주의의 혁신적 실험을 경험. 국민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법치성을 파괴하는 권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보여주었음.
- 피플파워 : 국민의 함성과 한탄이 “이게 나라냐!”,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표출. 6개월 이상 많게는 200만 적게는 70만의 국민이 매주 광장에서 시위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냈음. 단 한건의 폭력사건이 없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시위였으며,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전세계에 보여준 광장민주주의 (Agora Democracy)에 새로운 모델. 이 모델을 촛불혁명이라고 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들고 거리고 나선 국민의 힘에 의해 가능.

◆ 문재인 정부의 3가지 KEYWORD.

- 책임 (Responsibility) :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정부가 책임질 것임. 한반도 평화 및 성장 질서는 대한민국이 주인의식 (Ownership)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임.
- 협력 (Cooperation) :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틀은 국익우선과 협력지향임.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익은 평화질서 창출이며, 이를 위해 동맹국 미국 및 주변국과 당당히 협력해 날 것임.
- 공정(Fairness) : 법치와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한 외교안보정책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 동맹국과의 제도완비, 주변국과의 협력질서는 공정을 기본을 할 것임.
- ★ 책임, 협력, 공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 및 지지 확보.

◆ 3대 기조

- 대북억제체계 향상 :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축
 - ▷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방력 건설 : 투명한 국방비 증가와 효율적인 무기획득 방안 구축.
 - ▷ 책임국방실현과 굳건한 한미동맹, 병력정예화를 위한 국방개혁, 부모가 안심하는 병영문화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실현: 유연하고 실용적인 협력외교

▷국익우선 당당한 4강 외교, 적극적인 통상외교, 공공외교 확대와 동북아책임공동체 형성

●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 하나의 시장, 더불어 민주사회

▷ 한반도의 전쟁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안보관.

2. 한반도 안보환경 : 9년의 귀결

◆ 남북불신 및 대결 구도 강화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지속과 단절된 남북관계로 인해 남북간의 불신이 최고조인 상태.
- 강대강 구도가 지속되어, 한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

◆ 미북적대 관계 심화

-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대북협상 보다는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 구현.
-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협상 선호 세력의 입지가 매우 좁아진 상황.

◆ 북한핵 개발

-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4차례의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핵능력이 현실화 된 상황.
- 북한 또한 자신의 핵능력이 국가의 정체성으로 자립 잡혀 있는 상황.

◆ 군사적 대치 상황

-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중부전선 지뢰 사건 등 북한의 국지적 도발로 인해 양측의 전술적 군사대치 강화.
- 국방 핫라인 및 남북간의 소통이 전무한 상황. 오인과 오해가 제한전의 양상을 띌 수 있는 구조.

◆ 북한의 폐쇄성 강화

- 김정은 정권 기간동안 북한의 과도한 위협인식과 대북제재로 인해 대북정보 획득의 한계가 들어난 시기.
- 북한 핵심 지도층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북한 정권의 의도와 동기 파악 어렵게 됨.

◆ 대북제재와 사드배치

- 사드 도입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투명성이 결여됨.

- 그 결과로서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국면에서 한·중 관계가 틀어지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경제 보복을 받는 비이성적 상황 연출.

3. 문재인 정부 시대의 한미 관계 변화.

◆ 한미간의 공통된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토대를 마련.

- 한미 두정상의 공통 현안. 첫째는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통해 국가경제를 성장. “동맹의 지속가능한 진화”위해서는 이 두가지 현안 주목 필요성.
- 북핵문제의 기본은 대북억제이다. 한미 동맹의 대북억제 임무는 동맹의 정신임. 한미는 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
- 한미는 북한 문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평화적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책임 있음. 이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한미가 공동으로 창출하는가가 북한문제 현안임.
- 문재인 정부에게 국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경제문제.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현안적 차원에서 공통적 국내 문제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한미간의 상호보완적 경제 협력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 한미 FTA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FTA 개혁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한미 관계는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상호호혜적 관계로 진화해야 할 것임. 자유무역협정은 한미 동맹과 함께 “떨어질 수 없는 한미 관계”를 상징. 한국은 미국과 군사적 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유일한 동북아 국가이며 양국은 현재의 한미 관계를 업그레이드할 책임이 있음.

4.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 평화와 제재 그리고 대화

◆ 대한민국 국민의 온전한 일상 보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가장 중요. 안보와 성장, 성장과 안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줄 것임.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는 상상할 수 없음.
- 강한 안보와 한미공조, 북한이 평화적 비핵화를 통해 일상화된 위기를 불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한반도 평화정책을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임.

◆ 우리는 보다 스마트하고 전략적일 필요가 있음. 대북대화 혹은 협상은 매우 중요한 정책도구임. 이를 포기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대북정책 도구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 전략적으로 우리가 분리해질 수 밖에 없음. 문재인 정부의 관제는 “대북정책의 메뉴판”을 더욱 풍성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야 할 것임.

-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문재인 정부는 주도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대북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북한 문제를 공유하는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책임임.
- 북한의 불량행동에 대한 명확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대화와 협상에 나올 수 있는 메시지 또한 주어야 할 것. “김정은의 북한”이 어떠한 생각과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엔 어떠한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 파악할 수 밖에 없음.
- 한미가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제재와 압박, 대화와 협상의 “메뉴판”을 풍성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한미공조의 핵심이 될 것이다.

5. 북핵-남북관계 선순환 방안

◆ 정책방향

- 실사구시적 대북정책: 남북대화는 한미공조를 위한 기본 틀
 -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UNSCR 대북 압박을 상수로 유지.
 -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한의 진위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 “김정은의 북한”이 어떠한 핵의도와 남북관계 개선 의도를 지니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
 - ▷미국과의 정책공조를 위해서도 북한의 의도 파악이 매우 절실함. 이를 통해 한·미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임. 한반도를 정세를 우리가 운전하고 미국은 조수석에 앉아 대북정책으로 조율하는 방향 전개.
 - ▷저강도 비정치적 영역의 교류와 협력 재개 (예: 인도적지원, 이산가족상봉, 문화 및 스포츠 교류등).

◆ 북핵문제 대응 로드맵 : 관리와 비핵화 방안의 현실적 전제

- 탐색대화
 - ▷“조건없는”대화를 통해 “김정은의 북한”이 어떤 생각과 로드맵·비전을 갖고 있는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환경 조성
 - ▷한미협의를 바탕으로 5자간 대화재개 시그널 창출.
 - ▷북한에 대화재개를 위한 Incentive Structure 구현. 예) 2,29 합의 공약준수 :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선언시 인도적 지원 확충, Moratorium vs. Moratorium 등
 - ▷비핵화협상을 위한 대화 재개
- 6자회담 재개
 - ▷핵동결을 전제로 한 1차 협상 : 북한 핵능력 강화 (추가생산 및 성능개량) 활동을 동결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안 (IAEA 검증단 파견).
 - ▷수용시 UNSCR 대폭 완화 및 한미의 대북제재 완화
 - ▷핵감축을 위한 2차 협상: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와 핵감축 교환 협상
 -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3차협상 : IAEA의 사찰 및 검증을 통한 과거 핵활동 데이터 획득.

6. 결론 :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선순환구조

- 남북관계의 개선은 한국의 안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 북한의 시장화, 한반도 하나의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필요.
- 남북관계 개선을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진행하되, 그 주도성은 북핵문제와 병렬적으로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발휘.
- 저강도의 관계 복원을 지향하되, 북핵문제의 진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관계를 활용.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큰틀의 합의를 추진하되, 국제공조의 틀을 유지하고 때로는 이 틀을 변화시키기 위해 당당히 협력외교를 추진함.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한 조건을 창출하는데 집중함.
- 미국의 대북정책에 직접, 간접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세밀한 외교전략 수립.
-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안보환경을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임을 내부적 합의 도출.



2017  국가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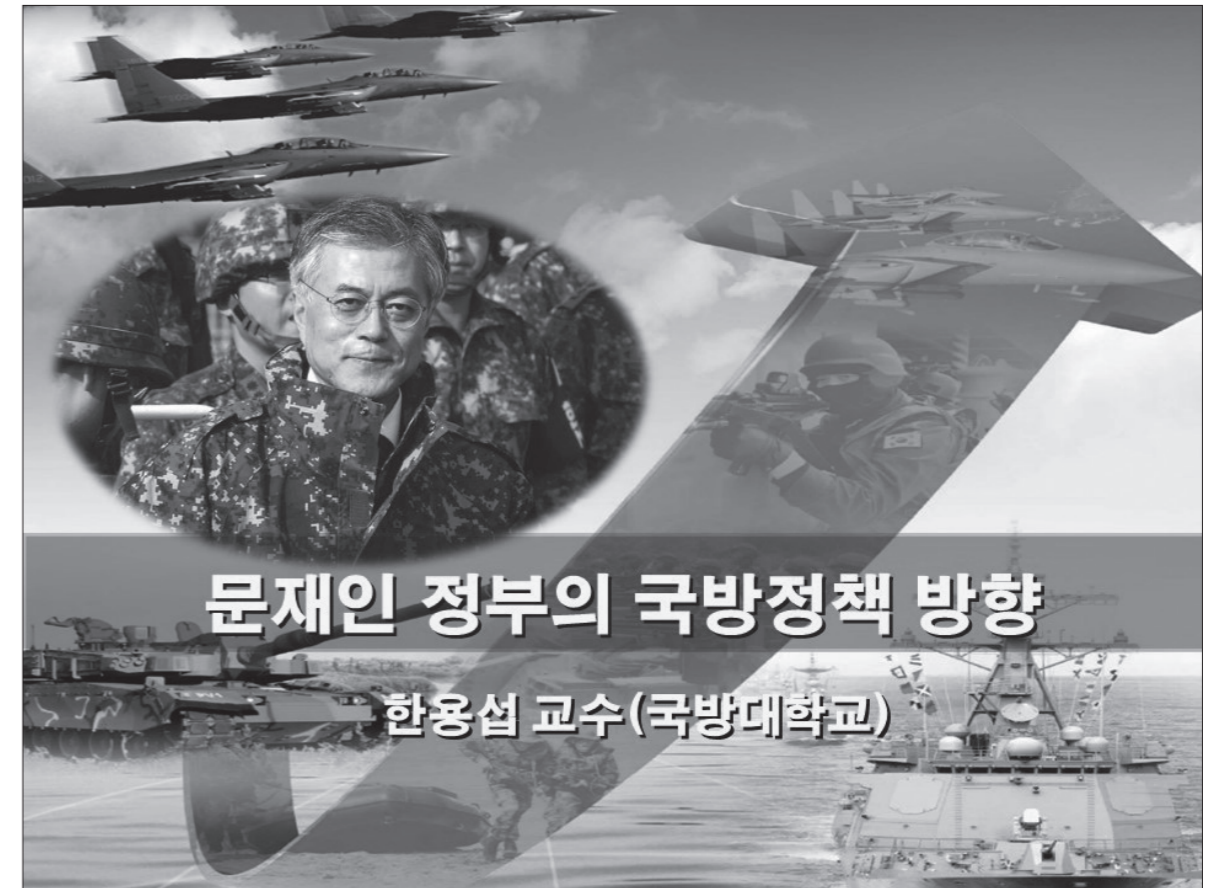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세션 1 새 정부 외교 · 안보 · 대북정책 추진 방향

02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

한용섭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

한용섭 교수(국방대학교)

순서

북핵대응전력 조기전력화

1

전시작전통제권의임기내 전환

2

국방개혁 강력추진·국방문민화

3

장병 복무여건 개선·군인권 강화

4

방위산업 육성

5

1-1.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전력화와 한국형 전략의 구축 노력

공약

- 북핵대응 핵심전력(KAMD, Kill Chain, KMPR)의 조기전력화
 - 한국지형에 더 적합한 독자적 방어체계(KAMD)의 조기개발 및 배치
 - Kill Chain을 실현가능하기 위한 독자적 감시정찰 및 타격자산 증강적 지휘부 마비전력, 전자기탄(EMP)증강 등을 추진
 - 북한의 공격시 적의 지휘부를 신속히 집중 타격하는 체계구축(KMPR)
 - 「전략 사령부(가칭)」 설치 추진. 방어와 대응형 군대에서 공세형 군대로



2-1.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내 전환

공약

-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착수
 - 한국군 작전기획 및 연습능력의 조기 확보에 주력



1-2.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전력화

정책제언

- 한국형 억제 전략의 형성: 수세에서 공세적 전략으로
 - 기존의 전선 전개형, 한미동맹 의존형 전략에서 벗어나 북한 비대칭 위협 및 동북아 국제정세에 대한 면밀한 평가 바탕으로 한국형 공세적 억제 전략과 전투역량의 형성 추진. 대북한 전쟁 억제역량 획기적 개선.
 - 북핵·미사일 위협대응 전략 및 전력기획
 - 거부적 억제+보복적 억제가 통합된 전략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 합동전략사령부의 설치 검토
 - 선제타격을 포함한 거부적 억제 실현을 위한 Kill Chain 조기 추진
 - 북핵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다층 방어능력 강화
 - 저층 : PAC III, 중층 : KAMD, 고층 : THAAD체계
 - 핵 억제는 미국이 주도, 재래전 억제와 대응은 한국이 주도

2-2.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내 전환

정책제언

-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여부 평가할 위원회 설치, 평가 실시
 -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계 전환계획 발전
 -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 구비
- 한국군의 작전지휘능력 및 연습기획능력 확충계획 마련
 - IOC, FOC, FMC 검증 시행
- 한미 간 전시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사령부(가칭) 발전. 연합구성군사 구성 관련 예규, 지침서 발전
 -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제

3-1.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국방의 문민화

공약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하여 <국방개혁 2.0> 추진
 - 대통령 직할 체제. 정부, 군, 정치권, 민간 참여 하에 집권 1년 이내 후속개혁안 확정
 - 통합전력 발휘 극대화를 통해 미래전 수행할 수 있는 군구조 개혁 및 과제 재선정
 - * 상부지휘구조, 인력구조, 획득체계, 무기체계, 사기, 복지, 국방운영제도 등 핵심과제
 - <국방개혁 중장기 기본계획>작성 통해 부대구조 개편, 50만명으로 병력감축 추진
- 병사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 증원
- 국방의 문민화 적극추진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실질적인 문민화율 70% 달성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주요 보직에 민간인 보임
 -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 추진

3-3.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국방의 문민화

정책제언(2)

- 국방정책 전문성 및 역량강화(“문민화” → “전문화”)
 - 『국방개혁2020』 시 문민화율 70% 추진이 초래한 부작용을 감안, 군·민 동시 참여로 윈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문성 강화책과 병행
 - 광범위한 국방분야 인재풀의 최대 활용책 수립
 - * 군, 학계, 연구소, 방위산업 등
 - 국방부 고위공무원 개방직 확대
 - 국방부 군인 → 합동성 강화 인력으로 흡수

3-2.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국방의 문민화

정책제언(1)

- <국방개혁 2.0>의 수립 및 성공적 추진
 - 『국방개혁2020』, 『국방개혁2030』 평가, 新국방개혁안 수립
 - 대통령 직계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정부, 군, 정치권, 민간전문가 참여
 - 합동전력의 획기적 증진을 위한 군구조 개혁
 - 소병력·대전력 군대로 개편
 - 국방운영혁신과제는 별도로 일상업무에 반영하여 진행
 - 육군 동원 전력사령부 창설. 예비군 전력 정예화 추진

4-1. 장병들 복무여건 개선, 군 인권 강화

공약(1)

-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연차적으로 인상
 -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30%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50%선까지 확대
-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지원
 - 모든 상해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병원 진료비 전액 보상
 -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 협진 개념하에 최고의 치료
-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 이수, 자격증 취득 등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와 지원 확대

4-2. 장병들 복무여건 개선, 군 인권 강화

공약(2)

- **군 장병 인권보호 강화**
 - 군 인권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 보호관’ 을 신설하여 군 가혹행위, 폭력 등 장병인권 침해 방지
 - 군 사법개혁을 통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 보장
 - 군 의문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 **우리 농산물로 군대급식 질 향상**
- **여군 양적 비중 확대 및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
 - 기존 여군들의 복무 및 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여군복지시스템’ 강화
 - 군 내 여군관련 성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히 적용
 - 선발은 물론 부사관, 장교, 장군까지 계급별 여군진출 확대
 - 육,해,공군 인사·복지·성범죄를 관리하는 여군관련 기구 강화

5-1.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방위산업 육성

공약

-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임기 내 생산목표 30조원 달성
- 수입에 의존해 온 각종 첨단무기(최근 5년간 24조원)의 국내개발 적극검토, 수입대체와 더불어 최첨단 기술획득기회로 활용
- 국방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분야와 성과기반(PBS) 확대로 민간산업 활성화
- 경쟁제도 정착으로 산업, 국방, 예산효율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민군 융합촉진 및 방산 육성

4-3. 장병들 복무여건 개선, 군 인권 강화

정책제언

- **병 급여인상, 제대 후 일자리 찾기와 연계**
 - 병 급여 50% 인상 후 적립, 제대 후 일자리 찾기까지 활용
- **청년 일자리 획기적 증가책 차원에서 장교·부사관 정원 증가**
 - 각군 사관학교 정원 각 100명 증원 (여성 10% → 15%)
 - 부사관 정원 대폭 증가 (여성 4% → 10%)
- **장병 인권 및 복지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 보호센터” 운영
 - 군내 여군관련 성범죄 척결위한 제도 수립
 -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지원
- **여군 양적·질적 증대**
 - 부사관, 장교, 장군까지 여군 진출확대
 - 여군 복지시스템 완비
- **군복무 중 대학/대학원 학점 이수·자격증 취득 권장 및 지원확대**



5-2.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방위산업 육성

정책제언

-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군내 활용을 위한 민관군 기술협력위원회 창설
 - 빅데이터, IoT, AI 등 활용 국방운영 혁신 및 인프라 구축
- 방산비리 척결과 방산기업 경쟁력 제고로 저비용 고효율 방산육성
- 국방 R&D 및 민간 R&D의 융합으로 첨단 방산 육성
- 방산 수출 획기적 증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각종 첨단 무기의 국내연구개발 장려와 지원으로 최첨단 기술 획득 및 방산 기업 경쟁력 획기적 강화

4th Industrial Revolution





결 론

-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국방부문)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 국방정책 추진방향
 - 북핵·미사일 위협시대에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을 적극 방어함으로써 책임있는 국방실현
 -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국방개혁 2.0>을 성공시켜 저비용 고효율, 소병력 대전력 국방체계 완비
 - 국방정책 전문능력 혁신과 4차 산업혁명기술 응용 효율적 국방운영 및 첨단 방산능력 구비



2017 연합뉴스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세션 1 새 정부 외교·안보·대북정책 추진 방향

03

대북정책 추진 방향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MINISTRY OF UNIFICATION

대북정책 추진 방향

2017.06.29.



대북정책 추진 방향
발표순서

- CHAPTER 01 한반도 정세
- CHAPTER 02 정책적 고려사항
- CHAPTER 03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검토

01 CHAPTER

한반도 정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3차례 핵실험, 50여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 명시('12.4)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 채택('13.4)
-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17.1 신년사)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각종 핵탄두 생산...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관문 통과”(175조선중앙통신)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 천안함 폭침('10.3)에 대해 「5.24조치」 단행
- 제4차핵실험(16.1) 이후 개성공단 전면중단(16.2) 및 우리정부 독자제재(16.3, 16.12) 시행
-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16.2 조평통 성명)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모든 합의 무효화 선언(16.3 조평통 대변인 담화) 등으로 대응
- 이에 따라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 고조

02 CHAPTER

정책적 고려사항

- ▶ 한반도 정치·군사 긴장 완화 필요
- ▶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간의 선순환 지향
- ▶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 강화 중요
- ▶ 대북정책을 둘러싼 세대·이념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분열을 극복할 필요
- ▶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활기 공급 △중장기적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가능

01 CHAPTER

한반도 정세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심화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핵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제
- △결의 2270호('16.3) △결의 2321호('16.11) △결의 2356호('17.6)
- △양자 차원에서 미국·일본·EU 등 주요국 대북 독자제재 시행
- 북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미중간의 북한·북핵문제 논의 강화
-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Korea Passing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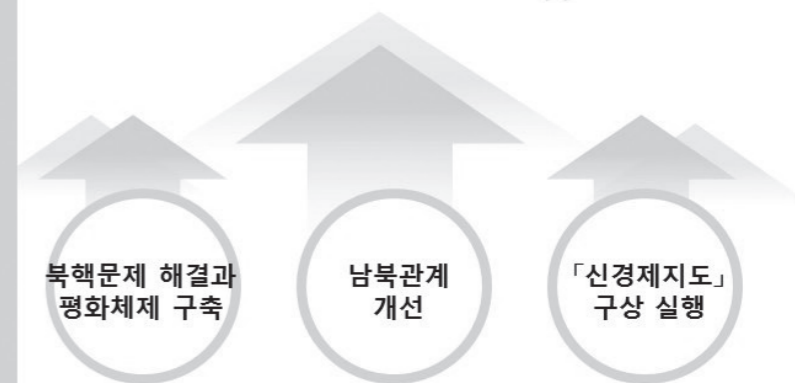
국내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감 및 안보 불안 악화

- 북한의 연이은 도발·위협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대두되고, 안보 불안도 증대
-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외식 약화
-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경향 뚜렷

03 CHAPTER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검토

“평화로운 한반도”



03 CHAPTER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검토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

-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 진전 추진
-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남북관계 추진

-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 직접 설득 및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등을 위한 남북 군사관리체계 구축
- 민간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추진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강화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프리카우프'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강구
-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MINISTRY OF UNIFICATION

감사합니다.



03 CHAPTER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검토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 재정립 및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계승하는 가운데 변화된 국제 환경과 남북관계에 맞춘 새로운 합의 도출
-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동의를 통한 발효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
- 안정적 통일정책 추진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 남북한 하나의 시장, 경제통합을 통한 생활공동체 건설
-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권역별 특성화된 경제협력벨트 구축,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 제공
-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 마련 및 통일경제 특구법 제정 추진



2017  국가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세션 2 한반도 평화와 북한 변화 유도전략

01

북한 핵 문제 실태 및 해결방향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02

동북아 신평화지도 구상

신봉길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초대사무총장
前 요르단 대사

03

최근 북한 정세 진단 및 변화전망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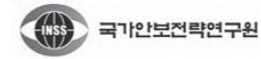
2017  국가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세션 2 한반도 평화와 북한 변화 유도전략

01 북한 핵 문제 실태 및 해결방향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 핵 문제 실태 및 해결방향

이수형 국가안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2017.06.29)

목 차

I. 북한 핵·미사일 능력 검토

II. 북핵에 대한 북한·미국·중국의 입장

- 1. 북한 : 평화협정-핵군축 프레임
- 2. 미국 : 최대치의 압박-관여 프레임
- 3. 중국 : 제재-협상 병행(쌍궤병행) 프레임

III. 북한 비핵화의 도전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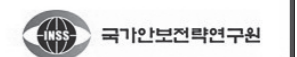
- 1. 관련국가들의 비핵화 프레임 온도차
- 2. 제재의 한계와 등가적 보상의 문제
- 3. 미·중 영향력 경쟁과 주변국 견인정책

IV. 한국의 북핵 해결 방향과 전략

- 1. 점진적·단계적·포괄적 접근
- 2. 남북 평화안보 프로세스 가동

V. 정책 제언

- 1. 3중 딜레마 관리방안 마련
- 2. 정책 추진 환경의 유연성 확보



Ⅰ. 북한 핵·미사일 능력 검토

1. 북한 핵무기 수 추정

- 최저 값 시나리오에서 최고 값 시나리오에 따라 2014년 10기에서 2020년 100기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
- ▷ 최저 값 시나리오는 북한이 경제적, 기술적 난관에 봉착하여 무기급 플루토늄의 생산을 위한 경수로 가동을 하지 않은 채 1기의 우라늄 농축설비만 가동할 경우를 전제
- ▷ 최고 값 시나리오는 2기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가동하는 경우를 전제
- 핵 물질을 무기화할 경우 보유 가능한 핵무기는 2014년 15기에서 2020년 125기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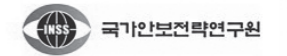
출처: David Albright,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 2015년



Ⅱ. 북핵에 대한 북한·미국·중국의 입장

1. 북한: 평화협정-핵군축 프레임

- 핵 보유국 지위 획득 전략
- ▷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핵·경제건설이라는 병진노선을 통해 핵탄두의 표준화·규격화·병기화를 추구하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내고자 함
- ▷ 북한은 2014년 9월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공개 표명
- ▷ 북한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핵 능력 강화를 통한 핵 보유국 지위 획득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맞서기 위해 자력자강의 정신을 강조



Ⅰ. 북한 핵·미사일 능력 검토

2. 북한의 미사일 능력

북한 미사일 종류			
한·미 명칭	북한 명칭	종류	사거리
KN-01	광성	대형 순항미사일	100km 이상
KN-02	화성 11형		20~150km
KN-03	화성 5형	단거리탄도미사일	300km
KN-04	화성 6형		500km
KN-05	화성 7형	중거리탄도미사일	1000km 이상
KN-07	화성 10형	중거리탄도미사일	3400km 이상
KN-11	북극성	장수항발사탄도미사일	500km 이상
KN-15	북극성 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2000km 이상
KN-17	화성 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5000km 이상



Ⅱ. 북핵에 대한 북한·미국·중국의 입장

2. 미국: 최대치의 압박-관여 프레임

- 트럼프 정부는 대북 정책 4대 기조를 공표
- ☞ 대북 정책 4대 기조는
 - 첫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불인정
 - 둘째,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함
 - 셋째,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 하지 않음
 - 넷째,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
- 대북 선제 타격 등의 군사적 옵션 강조
- ▷ 북한의 지속적인 중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와 특히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감행했을 경우, 미국은 심각하게 대북 선제타격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입장



II. 북핵에 대한 북한·미국·중국의 입장

3. 중국: 제재-대화 병행 추진(쌍궤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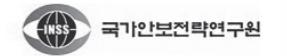
- 중국은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 강조
- ▷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협정 논의 필요성을 강조
- ▷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부정할 수 없는 지정학적 자산이기 때문에 북한을 방치 또는 포기하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음
- ☞ 중국의 비핵화 입장은 북핵 해결보다는 관리에 보다 많은 방점이 놓여 있다고 판단됨



III. 북한 비핵화의 도전요인

2. 제재의 한계와 등가적 보상의 문제

- 대북제재 효과를 위해서는 시간변수와 정책변수의 선순환관계가 중요하나 부조화 측면이 존재
 - ▷ 미-중 각국의 국내외적 상황변화와 북한의 대응 양태 등으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제재 공조체제의 등장기적 지속을 기대하기 난망
 - ▷ 관련국 비핵화 프레임의 상이성으로 제재의 목적과 수단 등에서의 차이 부각
- 비핵화에 대한 등가적 가치의 설정 및 보상 문제의 어려움 존재
 - ▷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태에서 지난 '9·19 공동성명'의 공약대 공약, 행동대 행동의 원칙 설정 및 적용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음
 - ▷ 북핵 불능화 및 폐기(안보)↔안보 교환 접근방식을 채택했을 경우, 보상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안보 보상(한미연합훈련 중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철수, 해상군사분계선 설정,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등) 우선 순위 설정의 난해한 문제 발생



III. 북한 비핵화의 도전요인

1. 관련국가들의 비핵화 프레임 온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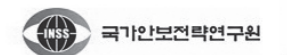
-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강력히 고수하는 가운데 비핵화에 대한 미-중의 강조점이 상이한 입장을 보임
- ▷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당분간 대북 압박과 제재에 정책의 강조점을 둘 것으로 예상
- ▷ 중국은 대북 국제공조에 일정 정도 참여하면서도 한반도 안정관리를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보다는 대화와 협상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
- ☞ 북한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비핵화에 대한 상이한 입장 차이로 대북 국제공조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제재의 실효적 효과보다는 관성적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III. 북한 비핵화의 도전요인

3. 미·중 영향력 경쟁과 주변국 견인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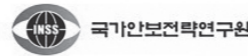
- 미-중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성격과 특성
 - ▷ 현재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에 걸쳐 향후 다가올 세력경쟁과 세력전이에 대비하여 주변국가들을 자신의 우호세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영향력 경쟁과 주변국 견인정책을 펼치고 있음
 - ▷ 미-중의 주변국 견인정책은 북핵 해결 그 자체보다는 이를 명분으로 한 자신의 국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도 존재
 - ▷ 미국은 북핵에 대한 명분으로 한반도 사드(THAAD) 배치를 정당화하면서 이를 아·태 지역에서의 미사일방어정책과 연계시켜 나가고 있음
 - ▷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북핵 문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미국의 한국 견인정책의 연장 선상으로 인식, 한미동맹이 대중 균형의 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코자 함



IV. 한국의 북핵 해결 방향과 전략

1. 점진적·단계적·포괄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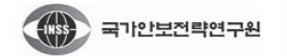
- 북핵 해결의 경로와 단계
 - ▷ 1단계 대화 모색→2단계 대화 재개→3단계 비핵화 프로세스 전개
→① 중단(동결)→신고→검증→불능화 및 해체 과정
 - 1·2단계: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대화방식·내용·명칭에 유연한 접근
 - ▷ 한미 공조 하에 북미 양자, 남북미 3자, 4자 및 6자 등의 대화 모두 수용
 - ▷ 1단계에서는 대북 제재 유지 및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으나 북한의 대화 복귀 시 필요할 경우 경제지원 재개와 비핵화 관련 모든 의제 논의
 - 3단계 비핵화 프로세스
 - ▷ 동결→신고→검증→불능화 및 폐기 과정을 점진적으로 추진
 - ▷ 북한의 참여 유인을 위해 동결의 내용과 기간 등은 유연하게 접근
 - ▷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등 남북 경제교류 및 지원 등은 비핵화 프로세스 진척 상황과 연계
- ☞ 3단계 프로세스 진행에 따라 북핵 문제 및 북한 문제 등의 대북 포괄적·일괄 타결 방향으로 진행



V. 정책 제언

1. 3중 딜레마 관리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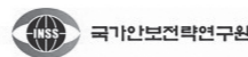
- 북핵 해결 과정에서 한국은 3중의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
 - ▷ 북핵 딜레마: 대북 국제공조 강화→남북관계 진전의 장애, 역으로 남북관계 진전→대북 국제공조 이완 가능성
 - ▷ 동맹 딜레마: 남북관계 경색(정체) 국면에서 북미관계 진전→방기의 동맹 딜레마 발생, 역으로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관계 악화에 따른 한미관계의 갈등 누적
 - ▷ 시지프스의 악순환: 북핵·동맹 딜레마와 복합적으로 작용, 남북관계의 진전→정체(답보)→재개의 악순환 반복
- ☞ 한국의 입장에서 3중의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분단구조에서 파생되는 안보와 평화의 불균형에서 파생



IV. 한국의 북핵 해결 방향과 전략

2. 남북 평화안보 프로세스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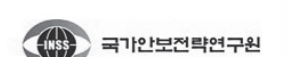
- 안보평화에 바탕을 둔 적극적 시장평화 프로세스 가동
 - ▷ 비핵화 프로세스와는 별개로 한국은 남북 평화안보 프로세스를 가동하여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적극 역할 모색
 - ▷ 안보평화(북핵 대응 핵심전력의 조기전력화를 통한 한반도 안보와 평화 관리)에 바탕을 두고 시장평화(적극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를 통한 안정적 남북관계 발전 모색
 - ▷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평화안보 프로세스간의 단계적·순차적 연계
- ☞ 당분간 군사적 억제에 기초한 외교적 해법 모색과 더불어 북한체제의 국제화 유도를 포함한 점진적·단계적·포괄적 대북 관여정책 추진



V. 정책 제언

2. 정책 추진 환경의 유연성 확보

-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책 추진의 유연성 확보
 - ▷ 정책원칙과 일관성은 정책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규정→정책의 유연성은 정책 목표의 변경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경로 중의 어느 한 경로에 해당
- 북핵 해법과 남북관계 진전의 상대적 차별화 전략 구사
 - ▷ 북핵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프로세스 간의 차별적 전략 도모
 - ▷ 북핵 결정론 경계→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제들과의 연계 최소화 (북핵 문제의 수평적 접근방법 강조)
- 점진적 대북 관여와 절제된 억지력 병행
 - ▷ 정부·민간 차원의 다방면의 동시병행 접근방법 추구(남남갈등 관리)
 - ▷ 남북간의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긴장에 따른 파장 최소화 방안 강구





2017  국가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세션 2 한반도 평화와 북한 변화 유도전략

02 동북아 신평화지도 구상

신봉길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초대사무총장
前 요르단 대사



한중일이 주축이 된 동북아 신평화지도구상

2017.6.29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신 봉길

개요

- 북한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핵 문제를 푸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역 협력과 통합에 기반한 새로운 평화질서를 동북아에 구축해야 한다.
-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2015.8월 문재인 대표 발표)이 한국의 경제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하고 남북한 경제공동체 수립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동북아 평화지도구상은 동북아 차원의 평화정착을 목표로 함.
- 북한 핵 해결 노력과 병행하여 기존의 한중일 3국협력메카니즘(Tr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을 대폭강화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다자협력체제로 발전시켜 이 지역의 새로운 평화지도를 그려야 한다.

배경상황, 필요성

- 핵 및 미사일로 한반도 안보 불안 크게 고조
 - 북한은 연례적인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한반도 긴장의 가장 큰 원인 주장
 -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솔로모션 버전(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 교수)
- 북핵, 사드 문제로 한반도 이해 관계국들간 복잡한 갈등 구도 발생
 - 우(友)와 적(敵)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 단기적 처방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 체제 수립 필요성 시급
 - 현 상황은 북한의 굴복이나 체제붕괴 또는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위협속에 들어가는 양자택일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양상

두가지 기둥 (pillar)

- ‘북한이 핵에 집착하지않고 생존에 자신감을 가질수 있는 주변환경 조성위해 동북아에 북한을 포함한 새로운 평화질서 수립 필요’
- ‘동북아 신평화지도구상’ 은
 1. 북핵문제 관리 및 해결
 2. 동북아 다자협력체제 구축의 두가지 기둥으로 구성

1. 북핵문제 관리 및 해결

1) 북핵문제의 단기적 해결 난망

- 북한, ‘핵은 70년의 고민끝에 내린 전략적 선택’, 절대 포기할수 없다는 입장
- 단기적 해결 시도(예: 핵시설 예방 타격 등)시 전쟁 발발 가능성.
- 대북제재와 함께 남북, 미북대화를 가동해가며 중장기적차원에서 대응 필요(북한체제의 변화 또는 김정은 체제의 조기 종식 가능성 등 포함)
- *2016.11.30. 유엔안보리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결의 통과시킴.

2) 북핵과 미사일 동결 우선 추진

- 중국의 ‘두개의 중단’ (핵, 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모라토리움)제의
- 북측은 핵과 미사일 실험,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영변원자로 가동 등 다섯가지 중단조치와 IAEA 사찰재개 필요(2016.9. 미외교협회 보고서)
- 남측과 미국은 상응하는 한미연합훈련 규모, 내용 조정

1. 북핵문제 관리 및 해결(계속)

3) 핵, 미사일 동결 빅딜시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험 논의

- ‘engagement without illusion’

4) 6자회담 재개 비핵화 논의 계속

- 남북이 합의한 10.4선언 이행
 - “남과 북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 (10.4선언 4항)
-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에 전향적 대응.
 - 10.4선언의 이행을 통한 정전체제 종식 문제도 검토
 -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위해...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중전을 선언하는 문제 추진” (10.4선언 4항)

2. 동북아 다자협력체제 구축

1) 기존의 동북아 지역협력 메커니즘인 한중일 3국협력 대폭 강화

- 2017년 하반기 동경개최 3국정상회의 적극활용
- 갈등의 핵심인 역사문제 해소 등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노력
- 3국협력기금(TCF) 조기 설립
- 서울 소재 상설사무국(TCS)의 역량강화, 3국협력의 허브로.

* 3국협력 메커니즘

- 정상회의 이외에도 외교장관회의 등 20여개 부문의 장관급 회의 가동 중
- 한국이 3국협력 체제 강화에 주도적 기여: DJ는 3국정상모임 최초발의, 노무현대통령은 정상회의의 3국내 독자개최와 사이버사무국 설립 주도, 이명박 대통령은 상설사무국 설립 주도

2.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 (계속)

4) 동북아 평화회의 제주도 정례 개최

- - 제주평화연구원이 주도,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석하는 평화회의 개최
- - 초기 단계에서는 1.5트랙 또는 2트랙 형식으로 개최
- - 북한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등 초청

* 헨리 키신저 박사의 문제의식(저서 'On China')

“한반도 문제의 경우 미중의 아태지역 전략과 분리해 볼수 없음.
북한핵은 협상을 통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동북아의 합의된 평화질서’ (agreed peaceful order)라는 큰 구도 아래서 해결되어야 할 것”

2. 동북아 다자협력체제 구축 (계속)

2) 3국협력의 외연확장

- 동북아 여타국가를 정상회의, 각료급회의의 대화상대로 참여시킴
- 한중일 +1, +2, +3 등의 조합(러시아, 몽골, 북한, 미국이 대상)
- 러시아(푸틴의 동방정책)와 몽골(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운용)은 비공식적으로 이미 대화상대 참여에 관심 표명
- 기존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의 실적 활용

3)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협력체로 발전시킴

- 러시아와 몽골이 북한을 동반하고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
- 안보 이슈를 포함 모든 문제를 이 다자협력의 용광로속에서 녹여 나감.
- 한중일이 주축이 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대해 함께 책임을 다하는 책임 공동체 구축

4) 남북한 통합도 동북아의 전반적 통합의 흐름속에서 추진



2017  국가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세션 2 한반도 평화와 북한 변화 유도전략

03 최근 북한 정세 진단 및 변화전망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최근 북한 정세 진단 및 변화전망

2017. 6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1. 정치: 지속과 변화

- ▶ ○ 수령제의 인격적 지배와 유훈 통치의 지속
 - ▶ ○ 7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의 정상화
 - ▶ - 당의 제도화: 당 기구와 당 활동의 정상화
 - ▶ ○ 김정은 체제의 엘리트 구조
 - ▶ - 원로 후견체제와 세대교체의 균형
 - ▶ ○ 당군 관계의 재조정
 - ▶ -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 변화
 - ▶ -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변경
- * 박봉주 총리가 당 중앙군사위 위원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2. 경제: 정부 주도 시장화

- ▶ ○ 정부 주도로 시장의 제도화 및 시장의 성장
 - ▶ - 이동전화 보급 370만대(2015.10)/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 ▶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 ▶ - 경영권한 현장 부여, 생산단위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 확대
 - ▶ - '복은 모자를 쓴 기업가'의 탄생: 금컵 식료품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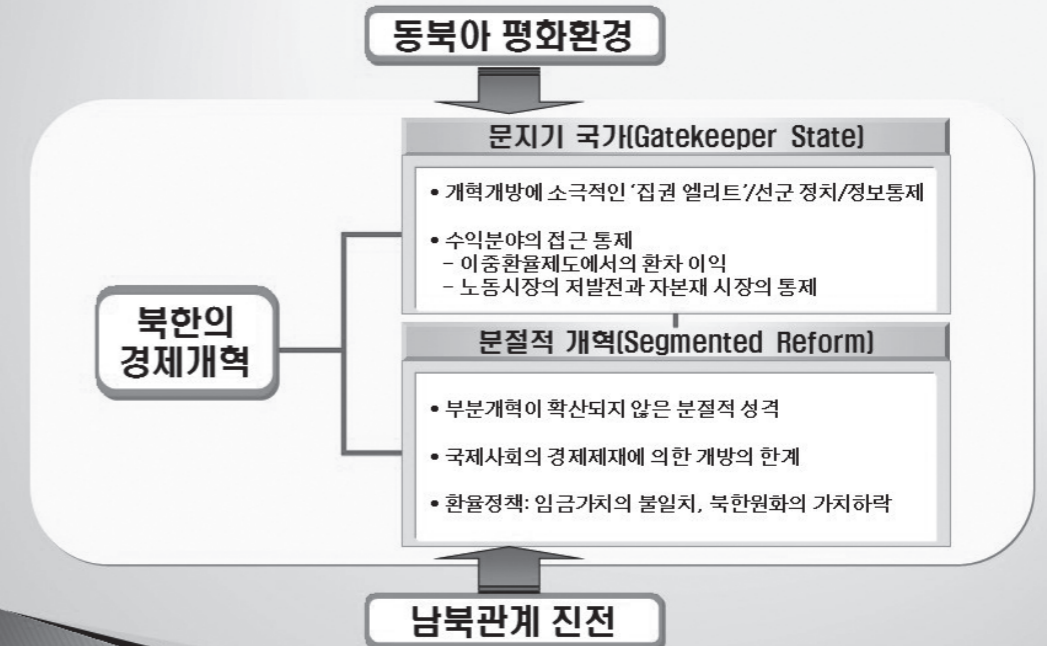
2. 경제: 정부주도 시장화

- ▶ ○ 최종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 중심의 시장화
 - ▶ - 금융, 노동, 자본재 시장의 저발전
- ▶ ○ 지역별 격차와 불균등 발전
 - ▶ - 대도시, 국경도시, 무역가능 지역 중심의 시장화

<제재의 영향>

-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의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영향,
- 다만 실질적으로 안보리결의안 2321호(2016.11 채택)의 석탄 수출에 대한 연간쿼터제 적용으로 감소 불가피

2. 경제: 북한의 경제개혁 구조



2. 경제: 대외개방

구분	중국	베트남	북한
개방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 특구 확대(점-선-면) ▶ 무역 분권화 ▶ 외환, 환율 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가공구 ▶ 무역 분권화 ▶ 달러화 현상과 외환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 제한 개방 → 단속적 ▶ 이중 환율 제도
외자유치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판매 권한(거대시장의 이점)이용 ▶ 직접투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시장보다 생산 기지 역점 ▶ 직접투자와 원조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시장 부재 ▶ 저임 노동력 활용(개성공단)

3. 대외정책: 최대의 억지

- ▶ O 최대의 압력에 최대의 억지로 대응
- ▶ - 핵물질: 현재 Pu 52kg, HEU 280kg 확보
- ▶ * 1개 핵탄두 생산에 Pu 2~6kg, HEU 15~20kg 소요시:
- ▶ 현재 22~45기의 핵무기 보유가능(HEU의 경우 매년 80kg 증가)
- ▶ - 핵탄두: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의 진전
- ▶ - 운반수단 다종화: SLBM과 KN 시리즈 등

<향후 전망>

- 억지력 수준을 반영하여 상응조치를 상향 요구: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주장, 한반도 비핵지대화, 군비통제에서도 상향 요구

4. 북한 변화와 남북경협

국제환경 개선

- 6자 회담과 북 핵 문제 해결
-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
 - 일반특혜관세(GSP)와 정상무역국

북한 경제개혁 진전

- 노동시장, 임금 직불제, 환율제도개선
- 포괄적 개방 환경 조성

남북경협

남북 호혜 협력

- 비교우위(북:노동, 남:자본/기술)를 살린 생산분업(섬유, 의류, 신발 등)
- 동행·동진 개선(제도적 환경 구축)
- 북한의 중계거점 활용(물류, 에너지)

4. 북한의 변화 환경

북핵 문제의 해결

북 핵 폐기와 평화 체제

관계 정상화(미·일)

북한에 변화압력

선군 노선 수정과 정상국가화 압력

인권 개선과 경제개혁 요구

전략적 협력 모델

- 리비아 모델: 핵 포기, 관계개선, 후계보장
- 파키스탄 모델: 전략적 협력

VS

점증적 개혁 모델

- 중국·베트남: 점증적 시장경제화
- 쿠바 모델: 비동맹노선과 제한 개혁

4. 북한 변화와 평화 협력

비핵화 프로세스

상응조치

- 에너지 지원
- 협력적 위협 감소(CTR)
- Nunn-Lugar 방식의 적용

한반도 평화체제

신뢰구축(CBM)

- 정치·군사적 신뢰 형성의 근거
- 평화 증진 위한 공동협력
- 한반도 평화협정

평화 협력

기반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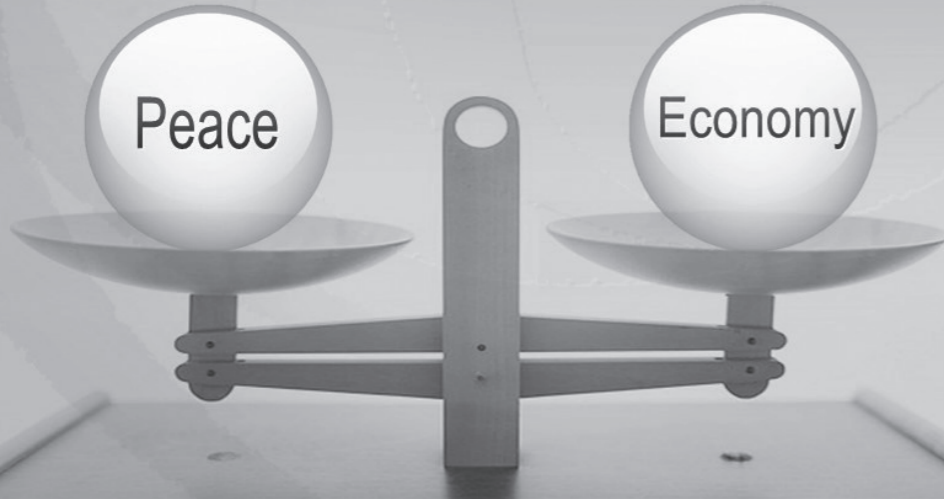
- 경제 협력심화
- 북한의 경제개혁 확대
- 통일 대비 인프라 확충

한반도 경제공동체



▪ Johan Galtung

“True peace is possible only with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2017  국가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세션 3 패널토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좌 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패 널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소장

